

# 'P4G 정상회의' 반기 든 환경단체들, 왜?... "무늬만 녹색"

위원회 설치, 다자회의 개최에도 반발  
 "행사·선언, 국제 흐름 맞추는듯 하지만"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전혀 없어"  
 "위기 유발한 기업들에게 책임 요구해야"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다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친환경' 행보를 잇따라 보이고 있지만 환경계는 오히려 이에 반기를 드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이 '겉만 녹색'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지난달 31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선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식이 열렸다. P4G는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민간기업,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을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결성된 글로벌 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환경분야 다자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비대면으로 열린 회의에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등 각국 정상들이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역설했다.

앞선 지난달 28일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직속 기구로, 산업·경제·사회 등 영역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신설됐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한 총 97명에게 향후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혁신, 경제 산업 생태계 혁신, 녹색생활 실천 등 정부 정책 심의·조정 역할을 부여한다.

이처럼 기후·환경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환경단체는 이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 활동이 걸만 친환경적인 척하는 '그린워싱'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그린워싱'이란 실제로는 환경친화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기술 등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꾸며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장 환경주의'라고도 불린다.

주요 기업들에게 제기되는 비판인데, 일례로 최근엔 국내 화장품 브랜드가 종이 용기를 사용했다며 내세운 화장품 내부에 플라스틱 용기가 있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환경단체 등 300여개의 단체가 모인 기후위기비상행동(비상행동)은 지난 30일 P4G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는 DDP 앞에서 퍼포먼스를 펼치며 회의를 규탄했다. 이 과정에서 단체 관계자들과 경찰과 충돌이 벌어졌고 한 할

동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권우현 비상행동 집행위원은 "정부가 행사와 선언들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탄소세 도입이나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를 선언한 나라들은 실제로 석탄화력 발전소 퇴출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로드맵조차 없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9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석탄발전소 60기를 30기로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권 위원은 이에 대해서도 과감한 감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가동연한이 다 돼 발전소 가동을 중지시키는 것을 기후위기 대응책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엔 문 대통령이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해 향후 국내 추가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 금지 등에 대해 언급 하긴 했으나 국내외 해외에 증설 예정



인 발전소 10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경단체들은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해선 설치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실효성있는 기후 대응책이 나오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 위원은 "녹색성장위원회 등 여러가지 환경 관련 위원회를 통합해서 시민사회와 논의하겠다는 것엔 동의한다"며 "그러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100인 중 대다수가 산업계와 학계에

서 미약한 환경 정책에 동의했던 사람들이어서 적극적 탄소중립 이행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려가 당연히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계와 재계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기존의 정부 정책은 산업계에 너무 유리했다"며 "기후위기를 유발한 기업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본부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대회**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탄도항 앞 바다에서 어업인들이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상방류 결정에 항의하며 해상 시위를 하고 있다.

## 통증완화 주사 맞아야할 중학생에게 AZ백신 접종한 병원

광주의 종합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던 중학생이 의료진의 실수로 30세 미만 접종이 금지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5월31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구 모 종합병원 의료진은 접종 대상자가 아닌 A(14)군에게 AZ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 기관으로 지정된 해당 병원이 AZ백신 접종 공간과 일반 주사실을 분리하지 않아 벌어진 일로 방역당국은 봤다.

A군은 당일 진료를 마치고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 주사를 맞을 예정이었고, 의료진은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 오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선 임상시험 결과 등을 토대로 30세 이하 대상자, 임신부에 대한 백신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AZ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병원 측은 혈전 생성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A군을 입원 관찰했으나, 별다른 증상은 없었다.

## '중국산이 국산으로' 분말소화기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광주세관, 소화약제 원산지 위반 2개 업체 단속



광주본부세관은 5월31일 중국산 분말소화기 약제를 국내산과 혼합사용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중국산 재활용 소화약제와 한국산 소화약제를 혼합 사용해 놓고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로 허위표시한 혐의다. 허위표시된 소화기 물량만 총 85만대, 101억여 원 상당에 달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일제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소화기는 사용기

간 10년이 경과한 폐소화기에서 소화약제를 추출해 재활용 공정을 거친 친환경 ABC 분말 소화기다.

소화기업계는 최근 폐소화기 배출량이 감소하고 재활용 소화약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중국산 약제를 혼합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소화약제가 2개 국 이상에서 생산된 경우 모든 국가의 원산지를 구성 비율과 함께 표시토록 규정돼 있으나 해당 업체들은 이를 허위표시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소화기에 재활용 소화약제 100%를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 형식승인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관련 기관에 이첩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소화기 형식승인 변경신청 없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